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한껏 받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다. 처음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부터 다선 의원까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 생각하며 당선 후 같은 마음으로 제20대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 믿는다.

지역건설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개원할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가 있다. 우리 강원도 건설산업을 위해 국회의원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사업 예산을 받아 건설산업 발전에 힘써 주기 바라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매가 되어 가능한 모든 역할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

최근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 효과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건설 수주는 지난해보다 4.5% 감소했다. 또 건설 정책 또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라 규제완화가 예상되나 건설인들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만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아닐 것이다. 건설생산체계에 역행하는 업역갈등 유발행위 및 하도급규제 법안 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활동과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내 건설산업의 경우 정부 정

강원포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책이나 실물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현재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복지예산의 확대 및 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와 일부 발주처의 현실성 없는 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부진의 늪에 빠져 들과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지역에 기반을 둔 상당수 중소기업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나 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사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대기업군의 대형 건설업체의 지방 건설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체들은 자생력을 갖고 건설시장에서 버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만을 무작정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지방 건설업은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업이 회생되고 활성화되어야 지역경기가 부양

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업계 스스로도 자생 능력과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데 소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경제, 바닥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도 약속하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특히,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청정지역으로 관광 인프라는 어느 시·도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강원도는 발전 못하고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본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고 원활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증폭 및 과잉규제의 개선, 낙찰률 상향과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적용, 발주기관의 부조리 및 무분별한 특허적용 관행 근절, 건설산업 육성 등의 대책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건설업계의 당면과제 해결과 활성화는 지역경기와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강원도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될 국회의원과 강원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사 실적 업종·종류별 세분화

앞으로 건물이나 교량 등 특정분야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선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기성실적을 업종과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건설업은 4개 업종의 33개 공사로 나눠 기성액을 산정하지만 토목공사에 교량·터널 공사가 빠져 있는 등 일부 공사가 누락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성실적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시행은 연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윤기자

올림픽 빙상경기장 진입도로 첫삽

선수촌~경기장·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간 도로개설 280억여원 투입 내년 9월 완공 ... 시 “보상협의 집중”

【강릉】강릉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본격화됐다.

강릉시는 선수촌~경기장 간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와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간 도로 개설공사가 11일 착공돼 내년 9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8억원이 투입되는 선수촌~경기장 간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는 경포사거리~중앙감리교회 간

1.1km 구간에 폭 12m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신설하고 중앙감리교회~국민체육센터~생활체육센터~SK안국주유소 간 1.47km는 기존 도로를 폭 20m의 왕복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162억원이 투입되는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간 1.54km를 현재 왕복 2차로에서 폭 20m의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교량 3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죽헌교차로의

통행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선수촌~경기장 간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중 우선공사 구간인 생활체육센터~SK안국주유소 간의 토지 22필지와 지장물 8건에 대한 보상 협의에 집중해 최근까지 토지 3필지, 지장물 3건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상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시공업체를 독려해 예정된 공기인 내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기기자 igjung@

올림픽경기장 건설비 대폭 증가

일부 경기장 존속 설계변경 필요 도, 기재부에 446억원 증액 요청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개축중인 경기장 건설비용이 400억원 넘게 증액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신·개축중인 8개 경기장 가운데 일부 경기장에 대한 시설 보완 등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에 당초 총 공사비 8119억원에서 446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현재 정선알파인 경기장, 알펜

시아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릉 하키경기장, 관동하키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있다.

또 보광스노경기장과 강릉 컬링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올림픽 대회 규격에 맞게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당초 이들 경기장을 신·개축하는데 총 81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경기장에 대한 IOC의 시설 보완 요청과 철거를 전제로 설계가 진행된 일부 경기장이 올림픽 개최 후 존속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IOC는 정선 알파인경기장에 조명설치 등 시설 보완을 요청했다. 또 사후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당초 대회 개최 후 철거하려던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강릉하키경기장이 대회 후 존속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기장 건설비용이 8119억원에서 856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는 증액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달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도는 올해 경기장 건설에 총 264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121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장 건설을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장 건설 과정과 사후 활용방안에 변수가 생기면서 건설비용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내년 경기장 건설 예산에 증액된 사업비도 반영시켜 경기장 준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